

내년 예산 국회단계 증액 전북도 발걸음에 '속도'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찾아 예산 반영 지원 요청

본격적인 국회 예결소위 증액 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내년도 국가 예산 국회 단계 증액을 위한 전라북도의 발걸음이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21일 연이은 정치권과 조찬간담회와 김관영 지사의 국회 방문 활동에 이어 23일에는 임상규 행정부지사의 국회 활동이 이어졌다. 이날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김운덕 의원, 정운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방문하고, 각 지역별 도정 주요 핵심사업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시립문화회관 혁신센터 구축 등이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자 예결소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을 만나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현재까지 예산 심사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원상회복을 비롯한 도정 주요 핵심 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국회 증액 요구 심사 과정 중에 정부 동기가 필수적으로 기재부 의견이 중요해지고 있어, 임 부지사는 예산상 주요 과장 등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이와 함께 분야별 사업으로 △디지털혁신 거점 신규 조성 △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등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전북도는 앞으로 남은 예결위 심사에 대응하여 김관영 지사를 필두로 한 지휘부의 지속적인 국회 방문·설득 활동과 함께 국회 상주반을 중심으로 심의 진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시군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상임위, 내년 예산안 심사

농산경위 "도민 70% 최우선과제로 경제 활성화 선정... 개선 노력해달라"

도 기업유치지원실 대상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3일 제405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내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07억4,000만원보다 474억1,000만원이 감액된 1,03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07억2,000만원 보다 480억이 감액된 2,727억2,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경계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과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기반구상 수립은 신규사업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특별자치

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비 4억에 대한 산출이 과다계산된 것으로 보이며 적정한 용역비를 재산정하라"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예산 대비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전북도의 의지와 상반된다"며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증액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와 관련해 올해 불필요해 참여하지 않아 8,000만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2024년 예산에 8,000만원을 반영한 점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순도비율에도 불구하고 22억(30%)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소상공인

에게는 코로나19 시기보다 어려운 시점에 타당하지 않은 감액 편성이다"며 "재정지속으로 여력이 없다면 실적이 있는 예산을 증액하라"고 주문했다. 김동주 의원(군산2)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분석해보니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41.3%, 지역경제 활성화 28.4%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증액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대폭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민기 의원(순창)은 "1기업-1공무원 전담 애로해소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반겨야 하지만 부담감과 쓴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양적인 실적재우기가 아니라 기업들에게 부담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세심하게 다가라"고 당부했다.

교육위 "농어촌지역 학생 위한 지역별 진학상담 방안 마련을"

도교육청 정책국·교육국 대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에 걸쳐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 교육국의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특별회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정책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32억7,700만원이 감소한 2조5,688억5,000만원을, 교육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5,700만원이 증가한 7,124억8,500만원을 제출했다. 원정수 위원(익산4)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결과보고와 평가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며 "연수 후에는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유 등 피드백을 통해 연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산이 당초 보고에는 2억이었는데 1억으로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민간위탁을 통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에도 비슷한 민간 '정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슬지 위원(비례대표)은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진학상담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진학상담의 기회가 적다"며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로 운영하는 진학상담 방안을 주문"했다. 장연국 위원(비례대표)은 "지방보조

금관리위원회 위원이 대거 교체되었고 심사 결과도 신규사업이 다수 선정되었다"며 "누가 봐도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회 예산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는 좋은 취지의 예산이다"며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해주시길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주11)은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집행부의 건축재정을 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구구성이 많이 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임대사업 시 다자녀 할인 혜택 추가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가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3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5일차 일정으로는 새만금전라과 외 7개의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다음은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의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먼저, 새만금전라과 소관사무와 관련 "새만금 SOC 예산삭감 반대 범도민 쉼기대회,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촉

구 쉼기대회 등 새만금 관련 행사의 철저한 계획 후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며 새만금에 대한 김제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공영개발과 소관사무와 관련 "타 시군구의 도시재생사업을 벤치마킹해 김제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항만과 소관사무와 관련 "신항만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늘려 논리개발을 강화해 전북 4대 도시로 옹비하는 김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제시민의 어업 허가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무와 관련 "직불금 신청 누락이 종종 발생해 김제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방식을 시스템화해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지적했다며 김제만의 쌀 브랜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농산유통과 소관사무와 관련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때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구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임대사업시 다자녀 할인 혜택을 추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술보급과 소관사무와 관련 "김제의 주생산 작물 쌀과 콩에 대한 연구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종자 보급 및 관리가 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도시회 상임위, 내년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도시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3일 제405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도시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도시회 상임위원회 소관 내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07억4,000만원보다 474억1,000만원이 감액된 1,033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07억2,000만원 보다 480억이 감액된 2,727억2,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도시회 상임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과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기반구상 수립은 신규사업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특별자치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협약식 전북도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을 위한 '2023 워라벨 경진대회' 우수기업 시상식과 가족친화인증기업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북대학교 등 39개 기관·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협약식'을 23일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손해 2심 승소

"일본, 국가면제 안돼"

1심 '각하' → 2심서 원고승 뒤집혀 위자로 인정
항소심 "日 행위 불법 해당... 위자료 2억원 초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쟁점은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를 인정할지 여부였는데,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위안부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 같은 원칙의 예외로 뒤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곽애란 할머니 등 17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본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소가는 21억1600만원 상당으로,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별 각 2억원으로 추정된다. 곽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제법상 규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이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논리다. 4년 넘게 진행된 1심은 2021년 4월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각한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분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경우다. 1심 판결에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면제'(국가면제) 국제법 규칙이 적용됐는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일본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안부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는 국가면제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국가면제 범위 관련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기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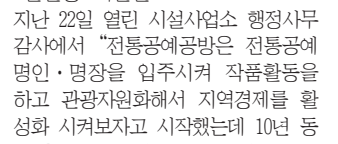
국제적 흐름이 다른 국가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면제'에서 비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제한적 면제'로 변화해 왔다는 점을 짚었다. 또, 국제연합(UN) 협약과 해외 판결 사례 등을 근거로 사법·상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해국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법을 근거로 일본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쟁 중 군인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운영하면서 10~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원고들은 자유를 억압당한 채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한 결과 상해, 임신·죽음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고, 중년 이후에도 정상 생활을 적용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이 같은 행위는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위자료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오며 "감사하다. 감사하다"며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을 모시고 감사드립니다"고 눈물을 보였다. /뉴스

"무주 전통공예공방 운영방안 새로 짜야"

"일본, 국가면제 안돼"

문은영 무주군의원
시설사업소 행감서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이 전 통공예공방의 지역사회 기여 정도가 낮아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공예공방은 전통공예 명인·명장을 입주시켜 작품활동을 하고 관광자원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보자고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운영했어도 이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과거 전통공예공방 입주작가 일부가 개인 활동에 치중하고 상주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이 입주작가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의원은 공방운영 과정에서도 작가의 친소관계에 따라 입주작가가 떠나거나 생활공간 무단대어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2025년 2월 종료 후 어떻게 시설을 활성화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은영 의원은 "목적치 분명한 것은 공예공방 사업은 포기하고 현재 계획 중인 신축 예정 건물을 대신해 공예공방 시설물을 사용한다면 건립비 수 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론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문은영 의원은 "목적치 분명한 것은 공예공방 사업은 포기하고 현재 계획 중인 신축 예정 건물을 대신해 공예공방 시설물을 사용한다면 건립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론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산물 유통센터 운영부실 더 이상 예산 요구 안돼"

오광석 무주군의원 산림복지과 행감서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산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산물 유통센터의 부실운영을 강하게 질타하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45억원이라며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오광석 의원은 "임산물 유통센터는 지금 농협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전전리시설 등은 농협이 필요에 따라 자체구비해서 설치하면 될 일"이라며 무주군이 재정추가가 없도록 위탁업체와 협의를 강조했다. 또한 오광석 의원은 임산물 유통센터에 있는 임산물 판매장 또한 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방식을 과감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촌 방치 폐자재 적정 수거 처리 예산 확보를"

강동화 도의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동화(더불어민주당·전주8) 의원은 농촌에 방치된 영농폐자재의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산유통에 사용된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등은 시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되지 않고, 농촌이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농촌의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강동화 의원은 "농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농촌의 미관과 환경을 해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 처리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기후변화로



이해 이러한 재자들이 예전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어 결국 영농쓰레기는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농폐자재를 농부가 직접 가져다 놓아야 하는데, 공동집하장과 거리가 먼 곳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실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영농폐자재 수거 처리를 폐농약과 폐비닐처럼 수거보상금을 지원한다면 영농폐자재 수거 처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